

민주 '대의원제 수정·공천률 변경' 혁신안 오늘 발표

비명계 "공천 불이익" 반발... 친명계 "민주주의는 1인 1표" 혁신위 "3선 이상 공천 페널티 검토 언론보도는 사실무근"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최종 혁신안 발표가 임박하면서 당내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10일 발표될 혁신안에 그간 '화약고'로 여겨졌던 대의원제도 수정안과 총선 공천률 변경안이 각각 담길 것으로 관측되자, 당은 사실상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로 쪼개져 충돌하는 분위기다.

이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전면적 쇄신을 앞세워 출범한 혁신위가 되레 고질적 계파 갈등만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비명계는 혁신위가 '대의원제 수정·공천률 변경'을 예고한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대의원제를 손보려는 것은 향후 전당대회

때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팔' (개혁의팔) 권리당원의 입김을 강화해 친명계의 당내 헤게모니를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본다. 아울러 이미 확정된 공천률 변경 시도는 비명계에 공천 불이익을 주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의심한다.

비명계 중진 이원욱 의원은 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혁신위가 '이재명 체제 1년'에 대한 평가는 없이 대의원제와 공천률을 건드리려 한다"며 "자기를 끼리 모여 쑥쑥닥닥하면서 그냥 감(感)으로 해보겠다는 것 자체가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 입장에서는 '개팔' 영향력을 강화하고 공천 제도를 손바서 비명계를 확실하고 끈 욕구가 남아서 혁신위가 일부라도 (기존 제도

를) 건드려주기를 바라는 것 아닌가"라며 혁신위의 최근 설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친명계 핵심인 김영진 의원은 라디오에서 "대의원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지만 제도 변화에 대한 시각은 다양하다"며 "찬반이 아닌 합리적 조정을 원하는 제3의 의견도 있는 만큼 잘 조정해서 내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김 혁신위원장의 설화와 관련,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사과와 혁신위 해체 요구가 분출하는 데 대해서도 "혁신위 구성은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이 대표 개인이 한 게 아니다"라며 "혁신위가 마지막까지 (혁신 작업을) 마무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도 혁신안은 도마 위에 올랐다.

친명계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대의원제 '수정'이 아닌 '전면 폐지'를 주장하며 "아무리 힘센 제왕도

민주주의를 막을 수 없었듯 민주당의 민주주의 1인 1표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은숙 최고위원도 "당의 주인인 당원이 대의원의 60분의 1표를 가지는 것은 옳지 않다.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이 관여해 임명하는 1만6000명 대의원보다 130만명 권리당원이 더 국민과 가까이 있다"며 대의원제 수정을 주장했다.

그간 당내에서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이 행사하는 1표가 권리당원 60표에 해당해 표 등가성이 '당원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반면 박홍배 전국노동위원장은 "민주당과 한국노총의 항구적인 정책연대는 대의원제와 노동 권리당원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며 "대의원제가 폐지될 경우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 파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지도부는 염두에 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소영 대학생위원장도 "혁신위는 총선과는 전혀 상관없는, 국민 다수의 관심 밖에 있는 대의원제

를 놓고 그것이(변경하는 것이) 혁신인 듯 외치고 있다"며 "(혁신위는)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묵살하는 폭력적 행위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혁신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당이 계파전 재점화 양상으로 치닫자 혁신위도 전전공공하는 모습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혁신위 최종안을 내일 발표하는 방향이었는데 이렇게 시끄러우니 한 번에 다 하는 것이 맞는지 더 논의해보려고 한다"며 "최종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김은경 위원장이 직접 발표할지도 미정인 상태"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혁신위가 '3선(選) 이상 공천 페널티'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혁신위 초창기 때 일부 그런 의견이 있긴 했는데 최근엔 사라졌다"며 "3선 이상은 불출마해야 한다는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유엔인권이사회 진정서 서명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日 오염수 투기 저지' UN인권위 진정서 서명

시민 추가 서명받아 이달말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유엔인권이사회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국제 여론전에 나섰다.

이르면 이달 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양 방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방류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우원식 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 상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낼 진정서 서명식을 가졌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안전 관련 과학적 대책이 미비한 데다 각종 국제 협약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진정서에서 엄격한 방산능 위험 평가

없이 추가로 오염수를 방출해서는 안 된다는 점, 오염수 방출로 인한 손실보다 이익이 더 커야 한다는 원칙을 어겼다는 의혹,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점, 일명 '세슘우럭'을 반영한 방사성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일본이 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는 등 정보접근권이 제한됐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허용해주는 외교 행보를 할지도 모른다는 국민적 불안감이 팽배하다"면서 "더는 윤 대통령을 믿고 우리 국민과 바다의 안전을 맡길 순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유엔인권이사회 진정단을 모집하고, 의원 및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이달 말 진정서를 낼 계획이다.

민주당은 일본이 오는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저지 표명을 요구할 것이라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을 고리로 여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한미일 정상회담을 오염수 방류 명분으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 의도"라며 "우리 정부의 안전을 일본 결정에 맡길 것이면 대한민국 정부는 대체 왜 존재하나.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은 방류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진행한 해양 방사능 검사 결과 세슘과 삼중수소 농도가 모두 기준치 이하의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일일 브리핑에서 "세슘과 삼중수소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

'먹사연 불법 기부' 여수상의 前회장 소환

송영길 외곽조직에 수억원 불법 기부·후원 의혹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 전직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을 소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전남 박용하(75) 전 여수상의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을 상대로 먹사연에 수억원을 후원한 경위와 송 전 대표 측과 후원 액수 등을 조율했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회장 재직 당시 여수상의가 운영 목적에 맞지 않게 먹사연에 수억원을 불법 후원한 것으로 본다.

여수상의는 박 전 회장 재직 시기인 지난 2018

년 7월~2021년 2월 다섯 차례에 걸쳐 총 8000만 원을 먹사연에 기부금·후원금 등 명목으로 지출했다. 특히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3개월여 앞둔 2021년 1~2월 총 4000만원을 집중적으로 후원했다.

박 전 회장은 이 밖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 업체와 사내이사로 있는 업체 등을 통해 총 2억 5000여만원을 먹사연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러한 정황을 포착해 박 전 회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관련 기업 등 15곳을 압수수색 해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송 전 대표의 인지·관여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이러한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시립요양병원 파업, 광주시가 해결해야"

강은미 의원 '수탁기관 책임' 지적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9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광주 시립요양병원 파업 장기화를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무분별한 민간 위탁, 수탁기관의 단체협약 불인정 등을 파업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위수탁 기관의 책임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시립병원 운영 목적은 시민의 건강과 이익이어야지, 수탁 기관 수익이 우선해서는

안 된다"며 "인프라 투자, 재원 지원 등 광주시의 정책 의지와 책임 운영이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광주시 주도 노사정 협상 테이블 마련, 제1요양·정신병원 단체협약 승계, 제2 시립요양병원 정상화 방안 제시, 위탁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3층
공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